

유럽이 일본보다 개혁 추진이 어려운 배경

1. 최근 독일과 일본 총선결과의 의미

- 최근 개혁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총선(독일 : 복지정책 축소, 일본 : 우정성 개혁) 결과 독일은 집권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반면은 일본은 성공
 - 이에 따라 향후 개혁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양국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시장참가자들은 전망
- 이 같은 결과는 전후 유럽과 일본이 모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를 활용한 방식이 서로 상이(유럽 : 복지 확대, 일본 : 실질임금 증가 등)함에 따라
 - 의회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경제시스템과 개혁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가 서로 다르게 형성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

2. 유럽이 일본보다 개혁 추진이 어려운 배경

- ① 전후 유럽과 일본 모두 미국으로부터의 기술·자본 도입 및 인적자본의 축적 등을 통해 높은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달성*
 - * 생산성 증가(1960~80년) : (일본) 미국의 28% 수준 → 76%, (벨기에) 65% → 90%
 - 1인당 국민소득(연평균) : 일본 6.1% 프랑스 3.9%, 서독 3.7%, 미국 : 1.7%
 - ② 높은 생산성과 성장의 혜택을 유럽은 근로자의 복지수준 및 고용보장을 확대하는 데 일본은 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, 기업집단 등 독과점체제 형성에 활용함에 따라
 - 향후 추진되게 될 개혁정책에 대한 양 지역 유권자들의 의식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근원적 토대를 마련
- ⇒ 유럽의 유권자들은 높은 복지수준과 고용보장에 익숙해져 개혁이 추진될 경우 잃게 되는 복지수준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보이게 되는 반면 일본의 유권자들은 개혁으로 잃게 되는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개혁대상도 일부 기업집단 등의 독과점체제의 로비계층으로 국한

③ 1980~90년대중 양 지역 경제의 성숙단계 진입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재정적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등 내재되었던 문제점* 표출

⇒ 양 지역의 정치 리더십은 개혁정책의 추진이 불가피

* 양 지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(유럽 : 재정적자 확대 및 높은 실업률, 일본 : 시장경제의 비효율성)은 고성장이 지속되는 동안은 표면화되지 않은 채 사회경제적 안정이 유지될 수 있었음

④ 그러나 그간 상이하게 형성된 정치경제환경 등으로 개혁의 초점과 유권자 의식이 서로 달라 금번과 같은 결과가 초래

○ 유럽은 조세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, 경쟁력이 낮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축소 등에 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져 광범위한 유권자 저항을 불러일으킨 반면

○ 일본은 일부 로비그룹(예 : 郵政族)의 기득권 축소 등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유권자 지지 획득에 성공

⇒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여 장기적으로는 본인과 후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

유럽국가중에도 이러한 전략이 추진되었던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최근 국민들이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개혁정책에 대해 공감하게 되고 결국은 지지하게 됨 (→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은 낮아짐)